# “금타 화재·대유 경영난…고용위기지역 지정을”

##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서 신청 현안 만장일치 의결
## 입주업체·종사자 피해 심각…발표까지 3~4주 소요

광주 광산구는 23일 구청 상황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대유위니아 사태 등 복합적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사진제공=광주시 광산구

광주 광산구는 23일 “최근 3년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대유위니아 주요 계열사 파산에 따른 악재가 겹쳐 지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광산구는 이날 오후 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산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안’을 심의하고 고용노동부에 광산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신청하는 현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노동계·경영계·시민사회·의회·행정 등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 12명이 참석해 지역경제 위기를 공유하고 지정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광주연구원 분석 결과 지난달 17일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연간 생산 손실은 약 6조원, 부가가치 손실은 2조7000억원, 취업자 감소는 약 1만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220여곳 중 광산구에 위치한 112개소로 파악됐고, 종사자는 약 5000명에 이른다.

현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가동이 전면 중단돼 정규직 직원 2350여명이 휴업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정상화까지는 최소 3년이 걸릴 전망이다.

대유위니아 사태도 심각하다.

5개 주요 계열사가 매각되거나 법원의 파산 선고로, 생산가치 3조5000억원과 부가가치 1000억원, 취업자 1만3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제안 설명에 나선 김영선 광산구 일자리정책팀장은 “광주 산단 입주업체 5149곳 중 2653곳(52%)이, 산단종사자 7만943명 중 4만9129명(69%)이 광산구에 있다”고 심각성을 알렸다.

이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피해 노동자의 일일 지원금은 7만원으로 상향된다”면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체불 생계비 융자 확대 등 긴급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공섭 광산구 일자리정책관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신청 후 고용노동부의 현지 실사와 고용정책심의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3~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광주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사례는 없지만, 2018년 전남 목포·영암이 조선업 붕괴로 지정된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금호타이어 측의 재건 로드맵 발표를 기다린 후 신청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병규 구청장은 “신청 이후에도 검토 및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실사가 이뤄지는 중간에 금호타이어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 제조업은 기아자동차와 금호타이어 양대 축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절반이 무너졌다”며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은 지역경제 생존을 위한 절박한 요구다”고 강조했다. 임정호 기자 ljh4415@

# 김옥수 구의원, 의회 상대 패소금 미납 눈총

## 판결 후 1년여 독촉에도 외면… 의회 “강제집행 예정”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이 최근 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패소금을 1년여 동안 납부하지 않아 눈총을 사고 있다.

더구나 해당 사례에 광주지역 기초의회 최초라는 점에서 불명예의 오점을 남기게 됐다.

23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제331회 광주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진행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등을 심사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산 예비심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의회사무국 징수결정액 2300여만원 중 미수납액은 21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해당 미수납액은 김 의원이 지난 2022~2023년 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패소금이다.

김 의원은 당시 의회가 의장을 선출하면서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서구의회를 상대로 ‘의장 선임 결의 무효 등 확인’ 소송과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1·2심 법원 모두 서구의회 의장 선출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2023년 10월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했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은 김 의원의 청구에 대해 ‘위법이 아니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6월에는 김 의원이 서구의회에 2100여만원의 소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났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지난해 11월 의회에 관련 업무를 위임했고 의회는 김 의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

이후에도 2, 3차 독촉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납부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서구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비용을 서구청장 이름으로 된 고지서에 납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회는 지방재정법, 광주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검토한 결과 하자가 없다고 판단, 독촉 시기 등이 마무리되며 김 의원에 대한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옥수 의원은 “집행부에서 의회로 징수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어 관련 자료를 요청해 둔 상태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이 없다”며 “현재 계고기간이다. 기간이 끝나면 어떤 방법으로든 납부하겠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5·18부상자회 또 불협화음…“회장 불신임 무효”

## 임시총회 문제 제기…금품 제공 의혹·소집요구 정족수 부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가 조규연 회장 불신임 안건 등을 가결한 임시 중앙총회는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5·18부상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5·18민주화운동교육관에서 열린 2025 임시중앙총회에서 조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가결됐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은 당시 열린 임시총회에 문제를 제기하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서명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금품이 제공됐다는 것.

실제 조 회장 측이 확보한 자료 등에는 ‘일부 부상자회원들이 자신을 찾아와 임시총회 서면결의서에 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거절했으나 잦은 요청에 마지못해 서명했다. 이후 전달 받은 봉투에 현금이 들어있었다’는 내용이 대다수였다.

이외에도 ‘현금 대신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가 진행하는 행사에서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회유했다는 내용도 남겼다.

임시총회가 개최 정족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5·18부상자회 정관 18조 2항에는 ‘중앙총회 구성원의 1/2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4주 안에 임시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 회장 측은 지난 4월24일 ‘151명의 회원 중 93명이 동의했으니 임시총회를 요청한다’는 서면을 받았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냈다.

임시총회를 동의한 93명 중 부상자회 내 징계자(4명)를 비롯해 소집취하서를 제출한 회원(29명) 등 소집 요청 부적합자가 33명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들을 제외하면 60명으로 임시총회 소집 요청 기준인 과반에 이르지 못한다.

이후 조 회장은 이 같은 불법적으로 진행된 임시총회에서 진행된 안건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16일 법원에 임시총회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또 이날 이사회를 열고 임시총회와 관련된 내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에 결의했다.

5·18부상자회 관계자는 “성립 요건에 맞춰지지 않고 불법이 자행된 임시총회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관련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뒀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변함없이 부상자회원들을 위한 업무를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

# 산단 투자 보조금 등 빼돌린 경영진 ‘실형’

산단 투자 보조금을 빼돌리고 채무 변제를 위해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경영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사기·지방재정법 위반·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사기·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조카 B씨(38)에게 징역 1년을, 양벌 규정에 따라 관련 법인에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전남 영광군이 대마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지급하는 입지·시설 보조금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납품 단가를 부풀려 3억3768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8년 8월 법인 운영자금 5억원을 지인에게 빌려주는 거짓 계약을 맺은 뒤 해당 금액을 현금 또는 조카 B씨의 계좌로 돌려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광주 서구 전 지역 골목형상점가 지정…전국 최초

## 18개 동·점포 1만1400곳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 30일 서빛마루서 대한민국 골목경제 1번지 선포식

광주 서구가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 지역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지역으로 전환해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서구에 따르면 최근 18개 동 전역에 걸쳐 총 119곳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서구는 기존 전통시장 중심으로 제한됐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음식점, 병·의원, 안경점, 약국, 미용실, 세탁소, 카페 등 일상 업종 전반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서구 내 점포 1만7000여곳 중 가맹 제한 업종, 휴·폐업 점포 등을 제외한 1만1400여곳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번 서구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사업의 핵심 전략은 지역화폐 도입 대신 국비로 운영되는 온누리상품권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 것이다.

또 생활권이 하나로 묶여있는 특·광역지자체의 경우 지역화폐보다 온누리상품권 통용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구는 별도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연간 수십억원이 드는 지역화폐에 비해 예산 부담 없이도 소비 진작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과 100일 만에 115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지정한 것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말 4곳이던 지정 상점가 수가 단기간에 119곳까지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3년간 동 중심 생활정부 체계 구축과 소상공인과의 협력 인프라를 꼽는다.

광주 서구가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 지역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지역으로 전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구는 올 상반기 상인회를 중심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충족을 위한 컨설팅과 행정지원을 집중해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가맹 확대를 넘어, 소비 촉진과 골목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적 시도라는 평가다.

정은화 문화경제국장은 “온누리상품권이 통용되는 골목에서는 소비자가 최대 20%까지 할인 혜택을 누리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상인들 중에는 매출이 10~20% 이상 증가한 사례도 확인됐다”며 “정책 효과가 지역 곳곳에서 체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온누리상품권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없이도 빠르게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수단이다”며 “이번 정책을 통해 골목상권 회복을 선도하고, 주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웃는 착한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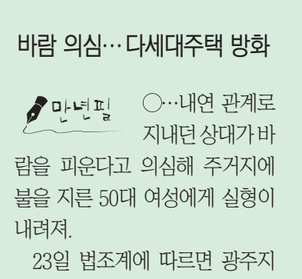
한편, 서구는 골목형상점가 확대를 기념하는 ‘대한민국 골목경제 1번지 선포식’을 오는 30일 오전 서빛마루문예회관에서 개최한다. 윤용성 기자 yo1404@

SOCIETY

2025년 6월 24일 화요일

### 오늘의 날씨

해뜸 05:19 해짐 19:51 / 달뜸 03:30 달짐 18:59




미세먼지 확인하세요!

| | | |
|---|---|---|
| 광주 | 광주 | 21~24 |
| | 목포 | 21~24 |
| 전남 | 여수 | 20~24 |
| | 순천 | 20~23 |
| | 구례 | 20~26 |
| | 해남 | 20~24 |
| | 완도 | 21~24 |
| | 흑산도 | 19~23 |
| | 고흥 | 20~25 |
| | 진도 | 20~24 |

| | | |
|---|---|---|
| 목포 | 밀물 (고) | 00:53 / 12:50 |
| | 썰물 (저) | 06:23 / 18:20 |
| 여수 | 밀물 (고) | 07:52 / 20:40 |
| | 썰물 (저) | 01:54 / 13:54 |

### 바람 의심…다세대주택 방화

만년필 ○…내연 관계로 지내던 상대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주거지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내려져.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 배은창 재판장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전 7시44분 광주 북구 한 빌라에 불을 붙여 1039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 조사 결과 A씨는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배은장 재판장은 “13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방화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